

제437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7월29일(수)

장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8)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3)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4)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1)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7)
11.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2)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9)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4)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6)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2)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0)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9)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3)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6)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3)
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8)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1)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1)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4)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5)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4)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2)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5)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1)
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3)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1)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9)
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6)
4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9)
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6)
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9)
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6)
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1)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7)
5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5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7)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7)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6)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6)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7)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4)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9)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0)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1)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4)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7)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5)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9)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6)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3)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7)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2)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2)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4)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1)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1)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5)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3)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8)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5)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7)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0)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5)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9)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0)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8)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9)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6)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8)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0)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0)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8)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9)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3)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5)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1)
 13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4)
 139.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140.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2
 ○ 간사(배준영) 인사 12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6) 1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1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8) 1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8) 13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3) 13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5) 1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4) 13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1) 13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7) 13
 11.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2) 13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9) 14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4) 14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6) 14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2)	14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0)	14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9)	14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1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3)	14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6)	14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3)	14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6)	14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0)	14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3)	14
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8)	14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1)	14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14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1)	14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4)	14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5)	14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4)	14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14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14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2)	14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5)	14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14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1)	14
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14
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3)	14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1)	14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9)	14
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6)	14
4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9)	14
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14
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6)	15
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9)	15
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6)	15
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1)	15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7)	15

5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	15
5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7) …	15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7) …	15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6) …	15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	1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	15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6) …	15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7) …	15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7) …	15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4) …	15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9) …	15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6) …	15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6) …	15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9) …	15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0) …	15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1) …	15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5) …	1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4) …	15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7) …	15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5) …	15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9) …	15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6) …	1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3) …	15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7) …	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2) …	15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1) …	15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0) …	1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9) …	15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	1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	15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1) …	15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2) …	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4) …	1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5) …	1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1) …	16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5) …	16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5) …	1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7) …	16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2)	16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1)	1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5)	16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1)	1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1)	16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1)	16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0)	16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3)	16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7)	16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4)	16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6)	1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1)	1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4)	1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8)	16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4)	16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8)	16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5)	1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8)	16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1)	1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9)	1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0)	16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0)	16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5)	16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2)	16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7)	1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0)	1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0)	16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5)	1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9)	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0)	16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6)	1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8)	1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9)	1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6)	16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8)	16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9)	1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4)	1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5)	1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8)	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0)	1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1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0)	1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8)	1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8)	17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9)	17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1)	17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7)	1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3)	17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5)	17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1)	17
13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4)	17
139.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17
140. 업무보고	22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신 회의인 만큼 위원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비어 있는 좌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재경위 회의장이 이렇게 짙 찬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준영 위원님부터 인사하시고 이렇게 교차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기형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이번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남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이 재경위 잘 이끌어 주시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박수영입니다.

우리 재경위는 전통적으로 아주 타이트한 논리 싸움 그리고 경제이론 싸움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장님과 오기형 간사님께서도 그 전통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박수영 위원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문진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훈입니다.

복지위에 있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 재정 관련해서 좀 쟁길 것들이 많아 보여서 재경위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 감시 제대로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윤영석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 또 행정부의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또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정책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앞애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 이성권 위원님 마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행안위와 정부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정수 조정이 곧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정수 조정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부강한 나라,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욱입니다.

국토위에 1년 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임이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장이었지요.

야당 위원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노력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임이자 전 위원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전관예우 해 줘니까?

○위원장 조승래 예, 그럼요.

○임이자 위원 반갑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민주당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공직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다음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경제정책 살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요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기회이자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국가의 재정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도 힘을 합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정태호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생각 외로 너무 짧게들 인사를 하셔서 가지고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오기형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배준영) 인사

(10시09분)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배준영 위원님, 간사로서 인사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배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오기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허리가 휘어집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폭증하는데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늘어난 이자로 살림살이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K자형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격차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입니다.

주식시장도 엉망입니다. 투전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리스크를 조장하고 뒷수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답을 정해 놓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몰이만 합니다. 곧 발표할 증세의 명분만 쌓는 듯 보입니다. 세금으로 일부만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도, 전월세 폭등이 가라앉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헬기 타고 수도권 내 부지를 찾고 싶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의 그린벨트 풀고 싶다는 말은 이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고물가를 잡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시대에 금리인상이 정답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상 최고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쌈짓돈으로 삼거나 기금 위주로 쌓기보다 국가채무를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국회의 충실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매년 200억 불의 대미투자금이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 제대로 선정되어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최종점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사분들께서는 빨리 협의를 하셔서 소위원회 구성에도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이 정한 일정과 절차대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나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양당 간에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또 합의일 것입니다. 또 국회의 관행도 존중해 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8)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3)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4)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1)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7)

11.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2)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9)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4)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6)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2)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0)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9)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3)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6)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0)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3)
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8)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1)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1)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4)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5)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4)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2)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5)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1)
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3)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1)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9)
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6)
4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9)
4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6)
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9)
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6)
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1)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7)
5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5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7)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7)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6)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6)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7)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4)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9)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6)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9)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0)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1)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4)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7)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5)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9)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6)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3)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7)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2)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1)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2)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4)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1)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1)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5)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3)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8)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5)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7)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0)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5)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9)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0)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8)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9)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6)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8)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0)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0)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8)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9)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3)
 1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5)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1)
 13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4)
 139.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10시12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9항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까지 이상 1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예, 의사진행발언.

○임이자 위원 지난 4월 한국은행총재 청문회 때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께서 당시 후보자님의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바 있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천 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문의 결과 외국 국적이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데도 국내에 거주한다고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장전입이라 한 사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고요. 5년 이상 거소불명으로 돼 있으면 국적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지키려고 위장전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위장전입은 대한민국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사유다라고 강조를 했던 점도 기억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그때 청문회는……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하지 마시고.

○임이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님, 첫 회의부터 그렇게 짝할 건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도 기재위원이셨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청문회는 채택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 국회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또 총재께서 그동안 간간이 사과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감사님?

○위원장 조승래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가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예,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인사청문 과정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국적 문제는 이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거면 이따가 질의할 때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9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및 최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윤종오 의원안은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신설하되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최혁진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토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둘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상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공제요건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과세형평성과 주거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요건 중심으로 일원화할 경우 보유주택을 임대한 후 타 주택

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형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보유자가 매도를 연기하는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직장·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현행 제도를 신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대하며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세제개편에 대응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완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상속, 동거봉양, 혼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사유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은 비수도권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특례 대상이 수도권 주택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은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거주를 이전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으나 미거주기간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실수요자의 실제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3년 한도 내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및 산정 과정에서 현행 홀벌이 가구로 지급되는 한부모 가구를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여 한부모 가구를 우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나 양부모 가구 대비 월평균 소득이나 평균 순자산액이 낮으며 노동과 가사, 돌봄을 동시에 감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경제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산정 시 홀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우대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한부모 가구는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양부모 홀벌이 가

구는 연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소득공제가 양부모 홀벌이 가구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정태호 의원 및 박수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액된 전자신고 세액공제 규모를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제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전자신고 공제액을 현행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동 세액공제의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도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신고는 과세자료의 입력·확인·오류수정 등 과세관청의 행정업무 일부를 납세자가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명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의 제재·처벌에 비추어서 적절한 비례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분리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인수제도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재원확보의 수단이라는 점

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공급망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략광물의 지정은 현행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와 유사하여 제도적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회에 사전 보고되는 매각 계획과 실제 매각 실적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매각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함께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관리운영권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기부채납된 부대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을 본 시설에 맞춰서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와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부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의 운영을 배제한 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이 현행 민간투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그리고 이 방식을 송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송전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은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의 지정, 통합 플랫폼 구축, 이용센터 운영,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데이터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질적인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현재 과기부와 행안부로 분산된 데이터 관련 조직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김태년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다

다.

○김태년 위원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조승래 또 했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한국은행

(10시27분)

○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40항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부 소개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계층별·산업별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국민의 우려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민생경제 안정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그리고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345 경제목표’,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불 달성이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하반기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5곡 3척 중심의 지방주도성장을 총괄 조정하여 성장의 성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 발표할 2026년 세계개편안도 경제 활력 제고, 조세형평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극화 대응에 재경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의 AI 역량 개발과 취업·창업을 돕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 안정화를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원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 혁신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AI·블록체인 중심으로 국고관리를 선진화하고 공공기관은 전략적 구조조정 안전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매점매석·할당관세 악용 근절 등 경제 분야 9대 국가정상화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전 직원 AI 활용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 재정경제부 자체 혁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 특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담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이 세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제1차관입니다.

허장 제2차관입니다.

김후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만희 세제실장입니다.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입니다.

황순관 국고실장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유병희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입니다.

허승철 국고정책관입니다.

주환욱 정책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경제정책관입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김동준 대외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정경제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같음하고 2쪽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재정경제부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였고 할당관세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과일 가격인하 효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정책에 담기 위해 부총리 현장 방문 등 소통창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8% 성장을 기록하여 연간 3% 성장 달성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수출 세계 5위, 국가경쟁력 6단계 상승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물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인 내용으로 3월~6월 평균 소비자물가 2.8%를 기록하여 주요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재정경제부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역점 과제 중 민생경제의 안정화입니다.

민생 최우선 과제로 물가를 하반기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에너지, 먹거리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매점매석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교란 행위도 끝까지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환에 맞는 인력 양성과 고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급, 수요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안보 품목 등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잠재성장률 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세제, 국고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능력 확보를 위해 국부펀드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여 전략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리고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극화 대응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AI 역량개발 20만 명, 일자리·창업 30만 개, 주

거 우선 충분 공급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저소득층 안정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가 양극화 대응에 있어 총괄·기획·조정 등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K-개발금융과 EDCF에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 또한 주요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우리나라에 집적시키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 혁과제 중 조세·재정 개혁입니다.

모든 조세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고관리를 선진화하고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단순개발 방식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또한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개혁입니다.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 AI 활용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을 전방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계약제도는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재정경제부 개혁입니다.

재정부는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업무에 즉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으로 양방향 소통도 강화하고 있으며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여 주는 정부, 재정부 혁신을 통해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여 재정, 금융, 세제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고 지방정부, 지방상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해외수출 등에 있어 애로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세제지원, 공공기관경영평가에 있어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재정부의 9대 정상화 과제입니다.

재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로서 경제 분야의 9대 과제를 선정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근절 등을 통해 특혜와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관행적인 조세감면 정비 등 낡은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공공기관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별첨 자료는 그간 재정부의 경제·민생 입법 추진실적과 연내에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중점 법안입니다.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수출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통상 등 우리 외부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AI로 상징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 대응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도약의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획예산처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고 국가의 균형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추가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삼고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재정여력을 보장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한편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 전 과정에 걸쳐 국회,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과 같은 종합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가고 이를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국회, 정부 모두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회를 대도약으로 만들어 내고 위기는 대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범 차관입니다.

김명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봉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입니다.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입니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정창길 재정성과국장입니다.

고재신 재 투자심의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처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기획조정실장 김명중입니다.

기획예산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 예산실 총 3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상 정원은 486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획재단처 출범 이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히 처리하여 경기 회복을 이끌고 물가 상승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신속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는 등 기금 자산의 혁신성장 투자 촉진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최초로 도입·시행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25년 말 역대 최대 건수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시에는 최초로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지방을 우대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간담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등 국민, 지방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시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이라도 대외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쪽, 대내외 여건 및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추경 등 재정정책,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과 산업 대전환,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지출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을 기획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 세 가지를 핵심 미션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기로 글로벌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총리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 세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과

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ی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AI 산업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안하고 향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적극적·전략적 자원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 자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핵심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고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량지출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효율화하여 15%를 감축하겠습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기초연금 개편,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10% 수준을 감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정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전반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가 예산 환류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심층 진단하여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재정 원칙도 확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재정 전 과정에서 참여·소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금년 말까지 구축하여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등을 활용한 정부 정책포털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관리 체계도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예산 집행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송 한국은행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신현송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확산으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7월 이후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중동상황의 전개에 따라 등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등은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제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시행하였으며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외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장하였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

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 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김제현 부총재보입니다.

이지호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김제현 부총재보가 핵심 현안 등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제현 부총재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김제현 부총재보 김제현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금년 중 국내경제는 반도체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중동사태 전개양상, AI투자 속도, 미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1~2월 중 2.0%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3월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영향받아 빠르게 상승하여 6월에는 3.2%까지 높아졌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 비용 충격의 전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13쪽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입니다.

금리정책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시장안정 노력입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 산업 관련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중동전쟁 진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

가겠습니다.

20쪽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입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24시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 등 원화 결제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및 일반 국민 참여 후속 실거래를 통해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 실시를 하고 주질의는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다 위원들이 한 번 다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합니다. 또 추가질의 혹은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데이터처장에 관한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법안 때문에 앓아 계신데 혹시 데이터처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데이터처장 법안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데이터처장은 이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 5분이니까 가능하면 5분 시간을 딱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위원 최대한 5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그리고 박홍근 장관님께, 한번 말씀을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선언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AI혁신의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 이를 확보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서미스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기업들이 또 불지에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함께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9500억 달러의 반도체 공급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AI데이터센터 또 GPU 200만 장 이런 대규모 투자 협력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 피지컬 AI와 같은 서비스,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 왔습니다.

그야말로 AI 3강으로 대한민국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교두보들을 치밀하게 마련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고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짧게 두 분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이 AI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국은 AI 대전환기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프라나 각종 제조라든지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준비가 잘돼 있는 나라 중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굵직한 빅테크들이 한국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또 선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협력에 우선 중점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글로벌 AI 3강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준 위원 박홍근 장관님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금은 AI·기술패권을 둘러싼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향후 1·2년이,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을 때 이걸 낙오가 아닌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업과 함께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위원 부총리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왜 우리 새정부 성장전략 작년 8월인가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AI 대전환 전략들도 발표가 되었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김남준 위원 그때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중심으로 발표했었던 내용들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짚막하게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액추에이터라든지 센서라든지 휴머노이드, AI 로봇으로 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소형·초강력한 배터리 이런 몇 개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넣기도 했습니다.

○김남준 위원 AI 발전 속도를 무어의 법칙과 비교를 하면서 무어의 법칙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분량이 한 2년, 최소 2년의 2배 정도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지요. 추격 경제에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선도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정말 빠르게 합심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서로 공유를 해야 그 비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당부를 드리자면 성장전력이나 아니면 재정운용전략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회와 상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성장하는 투자강국으로서의 정책지

원 그리고 제도개선 이행이 적기에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것들을 두 장관님들께서 한마디씩 짧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회와는 진짜 늘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AI 대전환기에 진짜 한국이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전에 박홍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은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잘 협력한다면 AI 대전환기에서 대한민국은 과거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재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또 도움도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느 때보다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우리에게서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밑천으로 제대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실은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도 국회 의견을 들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는 좀 여의치는 않았습시다마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회 의견을 들어 가면서 그런 중점적 투자 방향을 함께 수립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저는 현 정부의 경제수장이 구윤철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김 땡땡 실장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용범 실장이라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위원들도 반대한 바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굉장히 유연적이고 입법적인 이 정책 권고를 김용범 실장이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김용범 실장의 선 넘는, 도가 지나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럴 경

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처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 CEX라든지 DEX라든지 P2P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고 굉장히 파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청원이 지금 재정부로 들어가 있지요, 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다양한 의견이……

○김상훈 위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정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같은 경우도 이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해 주면서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가 되고 나서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으로 있고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영국, 호주,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해 주고 게다가 과세를 하겠다.

제가 만약에 가상자산 투자자라면—국내에 아마 11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굳이 국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장이나 해외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프(CARF) 시스템 아시지요, 정보자동공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상훈 위원 호주 등 29개국은 28년부터, 미국은 29년부터 카프 시스템 운영할 거라고 하니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카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굳이 금년 말 지나서 내년에 과세를 하겠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재정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과세고, 저희들은 지금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 주면서 기타 또 공제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금년 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 유예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저희들이 또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묻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상처받은 투자자들이 있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부총리님께서 주식시장 상황을 몇 번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게 5월 달에도 보면 ‘선진국 대비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저평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준석 위원** 지금 다시 또 5700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부총리께서는 지금이 저평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고평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그런 상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는 특정 종목,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50%를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 상황도 있지만 정책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게 줄어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부총리께 여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제가 물어본 것처럼—언급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 젊은 세대 중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주식은 매매가 쉽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오르면 팔고 물려 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자산 손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이 질의 했을 때 제가 부총리님께 기대하는 발언이라고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 당국자가 일회일비하는 식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상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일회일비하지 않고요. 단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선진국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는 하여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그 안정적이라는 게 결국, 주식은 부동산 같은 것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고위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막고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왜 이런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해외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해외 가서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하면 안정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5월 27일부터 도입이 되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어제도 보면 외국인 매도가 거의 4조 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전부 다 받아 간 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을 확립해 가지고 ‘폭락 이후에는 폭등이다’ 이런 식의 말이 주식시장에 돌면서 어제 사상 조유의 폭락을 하니까 오늘은 또 반등세가 있겠지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벌써 어제 확인된 금액만 개인 투자가 4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오늘 다시 내려갔다는 거지요, 또 보면 지금. 물론 오늘 장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한다지만 시장이 신뢰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재경부장관님한테 계속 물어볼 일은 아니긴 하지만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결국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에 있어 가지고 대안적으로 제시한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누차 언급하셨고요.

부총리님, 이거 한번 여쭙볼게요.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도……

○이준석 위원 사전적 정의로 보면 맞을 겁니다.

주식으로 얻은 거는 노동소득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주식으로 얻은 부분도 하여튼 자본시장에 기여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선순환 구조를 갖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같은 불로소득인데 대통령께서 그것이라고 권장하면서 이것은 생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투자다 이래 가지고 약간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본질은 위험성이 좀 더 높은 불로소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죽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대로……

○이준석 위원 역설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면 또 주식시장에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증시 활성화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약간 교착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는 절대로, 저희들은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막 변동성을 가지고 출렁 출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위원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기획예산처장관님, 한국은행총재님 반갑습니다.

먼저 수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0으로 올리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3.0으로 올리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국가 채무비율도 바뀌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여기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해서 D1 기준으로 47%로 떨어졌어요, 50% 미만으로.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50.6%로……

○김영환 위원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27년 한번 보시면 53.8%예요, D1 기준으로, 27년 기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53.8%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GDP 성장률이 반영되고 또 내년 GDP 성장률이 반영되는데 아직 수정은 안 하셨어요. 언제쯤 수정하십니까, 국가부채비율 전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작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고요. 아마 금년에는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다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박홍근 장관님께서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이게 IMF 4월 달에 내놓은 수치입니다.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6년도를 1.9%로 잡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2.6%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되기 전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54.4%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재정부의 수정 전망을 3.0으로 계산한다면 이 수치도 더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부채 관리 수준? 이게 상대적 관리잖아요. 이게 절대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규모, 그 국가의 경제 규모 이거에 따라서 상대적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그 시점의 수치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GDP라고 하는 분모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에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올해 경상 성장률이 12.3이고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그러면 지표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경제의 펀더멘털은 매우 좋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발표도 났지요? 영업이익 60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주가의 변동성 문제는 정책 당국이 정말 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될 거고 다만 이 펀더멘털, 체질에 근접한 주가 수준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정책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전망입니다. 취업자 증감이 당초 실질 GDP 성장률 2.0 계산했을 때 16만 명이에요. 25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0.8%였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0.3%를 간신히 올렸습니다. 그때가 19만 명. 그런데 2.0일 때 16만 명, 3.0일 때 15만 명.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도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AI 대전환하고 또 자동화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경력직 채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고 또 한쪽으로는 AI 산업 대전환의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 AI 3대 강국의 시점에 저희가 완전히 발돋움하고 올라설 때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

지금 4300조 투자협약을 했고, SK·삼성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 1400조 투자협약도 같이했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반도체 분야 제조업 1억 투자할 때 한 10명 했거든요. 10억 투자할 때 6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4300조 하면 계산이 됩니까? 1400조 플러스해서 6000조 하면 유발계수로만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600만 명.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되고 취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유발계수는 작아질 텐데 우리 미래 청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AI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기회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느냐.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정책으로 넣잖아요. 저는 여기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만 몇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처장관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장관님 부총리님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AI 산업 대전환에 우리 청년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같이 태워 보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 한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사실은 청년들은 전통적으로 취업 개념도 중요하지만요, 취업보다는 창업·경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게 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AI 교육을 통해 가지고 AI를 접목한 창업 비즈니스 기회 확대까지 감안해서 청년 일자리 그리고 또 고령…… 또 작년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에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기획예산처장관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재정도 투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제가 꺼낸 키워드가 ‘청년’이고 ‘미래세대’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요.

따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청년 분야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교육, 일자리와 창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산형성 그리고 주거 그리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별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부총리께서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20만 명 육성하고 향후 5년 동안 관련된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과도한 불안정성이에요—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안정성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는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부총리가 주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당연히 부총리가 주도하셔야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누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김태년 위원 아니, 이걸 부총리가 주도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워낙 진폭이 커 가지고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유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급격한 상승, 반도체의 과도한 비중,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수익구조에 대한 논란 등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할게요.

이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씨가 됐었는데 그때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이 이걸 키워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악몽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이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진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만들 때는 매우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파생상품을 만들면서 레버리지를 결합을 해놓으니까 꼭 파생상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파생상품에 레버리지를 결합시킬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빚투를 권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책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 봤어요. 몇 가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금 제안을 드릴 테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산 운용사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일 매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초단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시간 단위로, 예를 들면 한 30분 일괄 체결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증거금 비율 이것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만 죽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위험 기반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빠른 속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이 나오고 성과급만 종사자들은 6억씩을 받았다 그리고 또 국가 세수로는 100조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 중에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한 5조 3000억 정도 발행할 텐데 실제로 지금 집행되는 것은 한 2조쯤 되려나요? 2조 남짓 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발행은 한 5조 넘게 6조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용처가 불편해요.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규모, 매출액수로 제한을 하는데 업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출액수로 규모로 제한을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을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정해 놓고 있는 이것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쪽으로 전통시장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김태년 위원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권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요, 주변 상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 2만 2000곳에서 7만 7000곳까지 확대를 했는데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기 사는 집에서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데 가서 쓸 수 있어야 이걸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가까운 곳을……

○김태년 위원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부총리님, 부동산 세제개편이 임박해 있는데요. 엇그제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다, 세율이. 그래서 보유세를 세 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 말씀 취지 자체가 꼭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다기보다는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세 배 맞냐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취지 자체가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예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종욱 위원 근거가 뭐니까? 대통령이 세 배라고 말했을 때,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높다 낮다를 한 게 아니고 세 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배, 한 배도 아니고 세 배라고 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아주 높은 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교하면 또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종욱 위원 일전에 대통령께서 실효세율 0.15%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도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평균으로 보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낮다, 세 배를 올려야 된다, 실효세율이 0.15%’라는 말을 했을 때는 주무 부처 장관은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서 알려드려야지요.

대통령 귀에 0.15% 실효세율이라는 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머리에서 떠올랐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근데 그 부분도 왜냐 그러면 주택마다 공제가 다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우는……

○이종욱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토지자유연구소라는 데서 OECD 통계를 한 건데 이것을 예정처에서 ‘국가 간 비교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숫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는…… 아니, 사전에 해야 되겠지요? 기재부에서 저희들 국책연구기관 많잖아요.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그 말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주무 부처에서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OECD 통계에 보면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배고요. 거래세는 거의 4배입니다, 4배. 보유세가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유세는 평균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아까 말씀드린 0.15% 실효세율 이것은 특정한 몇몇 얼마 안 되는 15개국, 20개국 나라만 발표한 통계고 각 나라마다 모수가 토지만 잡았는지 건물만 잡았는지 평가인지 공시자인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정처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거를 재정부에서 제대로 말씀해 줘야 된다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요인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대비가 어려운 나라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디벨러핑 컨트리(developing country)가 아니고 디벨럽트 컨트리(developed country)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또 G7 국가하고 하느냐, 또 주요국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있는 통계 가지고 전체를 왜곡하지 말라고요. 공식적으로 쓰는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내릴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조금 줘 가지고 빨리 팔라고 매물 유도할 겁니다. 다음 주면 알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약이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요.

○이종욱 위원 대선 공약이었습시다.

그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뀝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유 공제도 없애겠다고 이제는 국민을 겁박합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짹짹 빌어야 됩니까, 살려 달라고?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서 집값 오르고 전월세 이 난리인데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초고가 주택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1년 사이에?

저는 악마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 놓고 하는 그런 식이 과연, 집을 왜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본인이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사 놓고 한 채만 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그게 과연, 거기에다가 금융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느 국민도, 저희들에게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 조승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재정경제부장관님,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 과세와 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이 담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투기

를 제재하겠다, 투기를 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OECD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OECD가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당한 부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세금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지금 당장에 급한 전월세난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 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집을 구매할 때 조건부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해 받은 돈을 금융계좌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하거나 그러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전월세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조만간 전월세 대책도 발표할 예정인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문진석 위원 그때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함께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 주시는 말씀이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현실에 맞는 어떤 정책, 맞춤형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저희들 징벌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안들을 다 담으려면 사실은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재정경제부 일이 많아질 텐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넣어서 정말 괜찮은 합리적인 방식이다, 방안이다, 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주인들이 또 이렇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문진석 위원 기재부장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에서 20.79%를 이렇게 연동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972년에 도입한 이래 54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됨에도 여전히 고정적으로 교부금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재정 당국에서 또 재정을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교육교부금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교부금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연동구조를?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새로운 교육환경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AI 교육이라든가 또는 기초학력이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돌봄교육을 비롯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이 더 많이 지출이 돼야 될 곳이 좀 덜 되고 또 급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를, 소모성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시키면서 연동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연동구조를 바꾸게 되면 교육재정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 충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합리화 조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합니다. 교육현장의 그 우려를 말씀히 저희가 없앨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는 2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학생 일인당 교부금은 1300만 원입니다.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68~69%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격한 교육 분야 안에서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개편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 지금도 유보통합 문제 관련해서 너무나 격차가 심한데 이걸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 이제는 지방사립대를 포함해 가지고 진짜 고사 직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다면서 거점에 있는 대학을 이제는 국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더 중요하게는 AI 대전환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교양·소양 교육이 아니라 직무 재전환을 위한 평생교육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했던 그 추세가 있습니다. 그 추세보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아예 부정하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계속 상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교육청에 인력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무원직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는 학령인구를 반영하자. 그러나 이미 그렇게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령인구 줄어든 걸 다 반영하지는 않겠다. 그중에 일부를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그 20년, 왜 20년을 저희가 얘기를 하나면요……

○위원장 조승래 조금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20%대에 연동이 된 게 2006년도입니다. 제가 초선 땔 때, 저도 사실은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22% 법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았습니다, 생각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전체 균형적인 투자를 고민하자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추세만큼 계속 이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늘려 나간다는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진석 위원 지금 개편안이 아직 마련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지금 정부안의 최종적인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저희가 향후에 입법과 함께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문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제가 오늘 재경위 처음이라서 앞으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사회지출, 재정 관련 분야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처들에서 준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기획예산처장관님, 장기재정 문제 중요하지요? 부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장기는 말 그대로 전망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주로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매년 예산과 함께 9월 초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게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복지지출 급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26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이 10.5%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의무지출인데요.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4년 동안 100조 원, 연평균 6.3% 증가할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복지제도라는 게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를 제도적으로 깎지 않는 한 계속 지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는 미리미리 우리가 따져 줘야 될 것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출연하고 이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도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 선진국, 지속가능한 나라들을 보면 복지가 늘린 만큼 부담을 적시에 같이 늘려 왔거든요.

그런데 부총리님,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동안 복지가 늘어만 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 부분은 거의 정치권 그리고 정부, 어쩌면 모르쇠로 일관해 온 부분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이 가능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를 좀 해 보자. 이러다가 이번 정부에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선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특히 재정 당국에서 미리미리 챙겨 주시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빚 폭탄으로 우리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후배들, 후세대에 욕 먹지 않으려면 함께 챙겨야 될 문제다. 그런 면에서 복지를 구조조정을 하든 아니든 세금이나 보험료를 늘려서 그걸 적절하게,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것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절충할 방안을 빨리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님, 기획예산처장관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재정 지속가능 얘기한 제 얘기가 틀린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구나 이 분야에 워낙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상훈 위원** 그런데 저도 정부 일을 해 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현안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후순위로 이걸 미뤄 놓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죄는 시시각각 늘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 그 방향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복지 수준이 원래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이걸 그동안 얘기를 해 왔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미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OECD 오늘 평균 이야기를 다른 정책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OECD 평균 수준까지 못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40년 정도 돼야 그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상훈 위원** 예, 지금은 복지 수준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중부담 그 언저리 와 있다고 보면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중복지 정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담은 초저부담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따져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작년 국감에 얘기했던 거 되새겨 드리면 이게 기재부, 예산처 자료인데요. 40년 후에 우리나라 평균적인 근로자들은요 세금 빼고 국민보험하고 건강보험료로만 7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질의는 여기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좀 답변을……

존경하는 안 위원님, 공감합니다. 지금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야 된다는 데 이해는 하는데 현실은 우리가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면서 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여력이 안 되고 또 아주 고소득자들은 또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안이, 물론 말씀하신 방안이 좋지만 그전에 초혁신경제로 가서 이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몇 개 더 만들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연간 들어오는 세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재위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당장 세금을 한다든지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초혁신경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센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초전도체, 특수강, 그래핀 이런 주장을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파이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부담을 안 늘려도 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가서 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재정경제부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토론회 같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자료를 말씀하실 때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부총리께서 그냥 정확하지 않은 말을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통상적인 선진국 대비 보유세를 한 3배 정도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말입니다.

그거는 OECD 자료를 보면 지금 OECD 평균 보유세가 0.95%입니다. 우리 한국은 0.87%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지요. 유사한 수준인데 그거를 3배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갖은 억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보유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든가 그런 말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그걸 명확하게 실수면 실수다, 아니면 잘못된 자료에서 얘기를 했다, 그걸 시정을 해야지 그걸 부총리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은 OECD 평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국, 특히 G7 정도하고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지금 대통령이 통상적인 선진국이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평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윤영석 위원 인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한 2배 이상 높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이 2배, 3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OECD 평균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이 1.6%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가 넘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금 과중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약에 보유세를 조정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거래세 부분도 같이 조정하는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거를,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고 함으로써 주택가격,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요. 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2배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 값이 2배 오르고 전세가 가격이 거의 한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임대료에 다 이게 반영이 되고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경제부가 사실 공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택지 조성할 때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목표 물량의 20%도 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 문제, 금융의 문제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재정경제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서 해결할 사항이 없는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자꾸만 쉽게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부에서 국토교통부, 전 정부 부처와 함께 그러한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일단 공급을 늘리는 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상반기 목표 물량의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여튼 공급을 늘리려고……

○윤영석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도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차피 주택도시기금도 기재부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택공급의 절반 이상은 지금 재정경제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인허가 단축 부분만 해서……

○윤영석 위원 말씀만 그리 하지 마시고 실제 결과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 정부 출범한지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데 공급이라는 거는……

○윤영석 위원 지금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위원님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딱 끊어서 1년 만에 주택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시리즈입니다.

○윤영석 위원 저를 자꾸만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적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실적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택지 확보 그다음에 인허가……

○윤영석 위원 재정경제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재정경제부가 지금 실적을 보시라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부담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사는 집 아니고 보유하는 집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주택하고.

○윤영석 위원 대통령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응능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발표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들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하고요.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부담을 시켜서 주로 사는 집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간사분들과 협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12시 반까지 오전 회의 질의를 진행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획예산처장 관계서는 14시 30분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제개편안 임박했지요, 발표가?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 과정을 보니까 연휴 때와 달리 굉장히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섯 차례 토론회 또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재정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좀 했고 70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

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될 우리 세제개편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제개편안 목적이 지금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겁니까,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 가지고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세수 목적도 아니고요, 징벌적 목적도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응능부담을 하라는 세제 합리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조세 부담을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부총리께서 누누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유세와 양도세 이게 글로벌 표준에도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지요. 체감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실효세율이요. 실효세율은 G7 국가나 OECD 국가 절반 이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고 세계적으로 우리 집값이 높은 것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율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반면에 양도세 있잖아요. 워낙에 주택에 대한 투기나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시장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유세는 다소 현실화시키면서도 또 양도세는 좀 경감시켜서, 기존의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부동산 과세를 손을 대면서 계층 간에 아마 귀착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고자산가, 평균 시세에 비해서 현재 우리 평가가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시키면서, 과표를 현실화시키면서 고자산 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약간 높인다, 다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산·서민층은 낮추겠다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응능과세를 지금 실현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이 정확히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민들 의견 청취를, 들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좀 낮춰 달라는 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범위로 줄여 주고, 살지 않는 집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응능을 부담하라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국민들 의견을 청취했고 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부세의 경우 지금 최근에 집값이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 중산·서민층도 중부세 대상에 편입이 되고 부담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좀 낮출 거지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도록 지금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다양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는 매물 잠김 해소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고령 은퇴층들이 여기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의견 경청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내용들이 이번에 발표가 돼야 된다 그걸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전월세 위주로 있잖아요. 많이들 돌고 특히 월세화가 되고 있으면서 또 전셋값, 월세값이 오르니까 굉장히 부담이 큼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월세 있잖아요. 소득세 공제 좀 늘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전세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 폭, 소득공제 폭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좀 늘리는 공급에 중점을 두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공제를 좀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자금의 금융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전 질의는 박수영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주식시장이 어제 종가가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아시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600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어제 종가는 6023이었고요. 오늘 전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지금 조금 내려가는 거 아까 보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와서.....

○박수영 위원 출근하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5500입니다, 5500. 많이 내려갔지요? 이게 어제에도 장중에 6000이 깨졌었는데 오늘은 지금 5000대로 다시 고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코스닥이 몇 포인트였습니까? 이것 보시라고 저 화면 띄워놔는데, 이재명 정권 출범할 때의 코스닥이 745포인트였고요. 어제 704점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6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주식시장이 9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 갖고 손해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이게 소위 훌쩍제라고 불릴 정도로 매도와 매수가, 오늘 매도 사이드카를 걸렀다, 그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 걸렀다 하는 식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9000에서 지금 6000, 어제 5500, 오늘 60까지 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선진국 증시에서 하루 걸러 하루로 이렇게 사이드카 발동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좀 커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렇게 급등한 사이드카 발동한 횟수를 보면 노무현 정권 때 10회, 이명박 정권 때 33회인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 몰려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권 때는 한 번도 사이드카 발동한 적이 없고 문재인 정권 때 7번, 윤석열 정권 때 2번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1년 반, 1년 조금 넘었지요? 그런데 무려 사이드카가 47회, 서킷 브레이커는 8회나 발동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거는 우리 부총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이것 보세요. 이걸 그래서 훌쩍제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하루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막 이렇게 매수, 매수, 매도 이래 가지고 빨간색은 지금 서킷 브레이커거든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같이 들어가서, 즉 8% 이상 빠졌다는 얘지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리 됐느냐? 5월 27일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1월 13일 날 김용범 실장이 증권사 CEO 소집했고 1월 30일 날 금융위가 입법예고를 해요. 그리고 2월 5일 날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4월 2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는데 부총리님은 입장이 뭐였습니까, 재정부 입장은? 회의도 하고 국무회의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입장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당시에 홍콩 같은 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데……

○박수영 위원 그래서 기재부도 찬성을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한국은 없다 보니까 우리 회사들이 가는 거니까 국내에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도 찬성하신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죠.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일단의 책임이 있네요. 홍콩 증시하고 우리 증시와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단일종목 레버리지장을 도입했고 도입 이후에 이런 홀짝제라는 결론이 나오고 반대매매가 지금 엄청난 그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변동성이라는 게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물론 해외 요인, 반도체 전체에 있지만 그전에, 반도체 문제 생기기 전에도 이 레버리지 도입 이후에 지금 홀짝제를 계속하고 있고 이 홀짝제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크게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요? 그것 부인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복합적으로 지금……

○박수영 위원 복합적이지만 이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이게 레버리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장관도 찬성하신 거네요? 재정부장관님, 부총리도 찬성하신 거네요? 일단은 책임이 있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것이 되는 거니까.

○박수영 위원 오후 질의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국은행 안 물어보기 그러니까 살짝 뭐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부처는 업무보고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해요. 그

런데 이 한국은행을 딱 보니까 설립 목적이 가장 먼저 나와. 설립 목적을 강조해서 가장 먼저 이 업무보고 할 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지금 경제상황이 성장은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그리고 그 배경으로 통화정책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조승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그 배경으로 통화정책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는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물가안정을 국민경제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통화정책이나 물가안정이라든가 금리 결정이나 이것들을 알가불가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그걸 딱 올린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마지막 얘기를 듣겠습니다.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보통 한 5개 정도 방향을 양쪽 기관이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받아들일 때 가장 공감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하다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 잠재성장력 확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해야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총력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양쪽 기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양극화에 대한 해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재성장력 부분은 훨씬 더 잘 아실 거니까 잘하시고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배고프면 건디는데 배 아프면 잘 건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의 경제상황을 쭉 보고 언론 내용을 보면 국가는 진짜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호황이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우리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국가는 부자가 돼 가지고 신이 난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아니 정부부처가 아니라 기업들은 K자 양극화에 의해서 반도체라든가 이것들 잘나가는 데는 잘나가고 어려운 데,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진짜 어렵고 그래서 이 성장 부분도 양극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배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적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도 올라가고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성과급 받으니까 막 두둑해서 백화점 명품샵이 다 난리가 나 가지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또 많아요.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이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평가받을 때 성공한 정부냐 성공하지 않은 정부냐라는 걸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장관님은 그 국민의 삶과 관련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처장관님은 이 지역 양극화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양극화는 보편……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잘나가는 산업 못 나가는 산업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되고요. 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부자 또 돈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인데 여기다가 구조조정을 좀 하고 나면 어쨌거나 경쟁력을 붙일까 해서 그 공정을 AI를 한다든지, 수소환원제철을 한다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좀 더 고급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R&D를 지원해 준다든지 철강 같은면 특수탄소강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고부가가치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게 지역입니다. 지역은 전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는 그나마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일단 이분들이 당장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중소기업의 어떤 공정에 적용한다든지 AI를 활용해서 공정 관리를 하고 제품을 관리를 하고 뭔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형 R&D라는 개념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해 주고 중소기업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로 의욕이 없다면 정부가 복지로 해결하되 일할 분들에게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신기술을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청년들 AI 교육 20만 명을 시키겠다, 또 반도체·AI 인력 양성 10만 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 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잘나가는 부분은 더 잘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어려운 K자 양극화에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보조를 해 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량 개발을 해 줘서 진짜 제대로 역량을 개발해서 살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를 매우 악화시키는 이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을 내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간 발표하게 될 권역별 성장엔진 그리고 그 성장엔진을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들을 함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거나 또는 그 지방에서 성장엔진과 관련된 기업이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는 특별 보조금까지 저희도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요건 개선 관련해서는 조만간 지방이전을 2차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관련해서 일관되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 우대 원칙입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소멸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들이 물량에 있어서나 지원율, 지원액 등등에 있어서 차등화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지특회계 안에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괄보조와 관련된 지원계정

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저희가 아마 10.6조까지인가 늘려 봤을 텐데 이것을 계속 늘려서 지방이 좀 더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지금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극화 말씀도 하시고…… 산업의 양극화, 세대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또 지역 간의 양극화, 계층 간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중에서도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철강 산업이 매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아주 지금 위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그 철강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K-스틸법도 만들고 또 K-스틸법 후속 법안들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쪽 철강이 아마 우리 철강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가 철강이라든지 또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내수·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또 이 산업용 경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철강을 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 이런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이런 데는 여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는데 철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강 부원료 관세를 좀 낮춰서 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법안들을 마련했으니까 장관님, 부총리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어기구 위원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대한민국 양극화 문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정말 좋습니다. 3·4·5 경제 목표, 정말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드신다고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들, 부총리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안상훈 위원님도 복지국가 말씀하시고 등등 했는데 이 한국의 K자형 양극화를 잡지 못하면 정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 K자형 양극화를 잡아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또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때만이 정말 우리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K자형 양극화를 잡겠다고 장관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K자형 양극화를 잡기 위한 주무부처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컨트롤합니까? 이게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전면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처별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 재정경제부가 관련 부처들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재경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재정, 세제, 금융, 산업, 교육, 주거…… 지역균형발전에서 총체적으로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실업의 범퍼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큰 위기를 맞고. 이게 1995년 IMF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 시대를 넘었다고 그래요. 자영업자들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또 10년 만에 거의 2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서 정말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최후의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 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물론 반도체니 이런 데, 잘나가는 분야는 더 잘나가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낙후돼 있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지역,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낙후돼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래야 진짜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정부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고용시장도 지금 보니까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에 17만 8000명 감소했고 또 제조업은 7만 3000명이 감소했고요. 건설업은 12만 5000명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쪽에는 잘나가지만 이 낙후돼 있는 이쪽 산업에서는 이렇게 일자리가 줄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끌어 줘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장관님께도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 학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쪽 반도체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점을 좀 꼭 유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그 말씀하신 K자 양극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보면 세대, 계층, 지역, 산업 아닙니까? 지역은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것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구어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계층 중에서도 이번에 기준중위소득이 6.7%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로 또 올랐거든요. 이게 60개의 제도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려 왔기 때문에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의견을 내다가 일단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정부 안에서 조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청년에 비해서 고령층들의 고용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에 대한 종합적 패키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산업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기업과의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저희가 당연히 재경부와 포함해서 포스트 반도체, 반도체 안에서도 고도화해야 합니다마는

반도체 이외의 산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산업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촘촘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철강 산업은 어떻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진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잠재성장률 제고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일단 단기적인 지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견디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역량 강화를 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석화든 철강이든 역량 강화를 하는 쪽에다가 예산처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진짜 AI를 도입해서 하는 생산성 제고라든지 기술…… 작은 R&D, 스몰 R&D를 통해서 역량 개발하는 문제, 교육을 시키는 문제 이런 식을 통해서 최대한 하여튼 단기적인 지원, 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재경부가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 철강 산업……

○위원장 조승래 여기구 위원님, 10분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여기구 위원 죄송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철강도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잘 챙겨 주시고, 윤후덕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여기구 위원님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에 처해지는 분야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뭘 해 주는지 이것을 서민들이 다 총재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3%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2.1% 정도 올랐지요. 2.0%라는 목표치라는 게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지요, 이게?

○한국은행총재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장도 하고 안정도 하고 물가도 안정화하는 그런 아주 적절한, 2.0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 소비자물가율이 3.2%까지 올라갔고 생활물가는 3.4%까지 올라갔어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연내에 가면 3%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총리께서는 업무보고에서도 3%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3% 이내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3.2%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여러 가지 생산구조를 통해서 좀 올라갔는데 지금 헤드라인보다도 근원물가를 저희들은 더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근원물가가 지금 한 2.5% 저희가 5월 달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 근원물가가 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원물가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경로를 통한 그런 인플레이션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경기 호황에 따른, 이런 성장의 견조한 이런 흐름에 따른 수요처 압력도 계속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16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지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기에 또 올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또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일단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함으로써 근원물가의 상승을 일단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상 시기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앞으로 저희가 입수할 그런 데이터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부총리께 말씀드릴게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전이라고 업무보고에도 표현을 해 났어요. 좀 더 신경을 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서민들은 참 힘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님, 장관을 하시니까 일반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좀 그래요. 칸막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안에서 경제장관으로서 팀으로 토의를 또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관련 현안 회의에 제가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대통령께도 많이 건의하시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보고도 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필요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박홍근 의원이 이 옆자리에 있으면 경제 현안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제안도 하고 그럴 텐데 정부 안에서 또 청와대에서 그런 식견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문제도 정부적인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적인 사안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예요. 교육교부금 문제도 우리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분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정부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주신 당부 잘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닌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복지 수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비효율이라든가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대의 추이에 맞게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재개편할 때가 되었다, 그 일을 기획예산처가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에 또는 국회나 정당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간에 잘 협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민생물가 안정, 서민생활 안정, 부담 경감은 진짜 이재명 정부의 제일 1번의 정책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목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달에 24.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도 설정하고 또 유류세도 인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할인 정책,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고 품목별로 수입을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 5년까지 누적된 물가상승률이 20%가 넘어요. 생활물가는 34% 이렇게 올랐어요. 좀 더 정책을 집중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회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이광재 위원이 안 계셔서, 임이자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다까?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재정경제부 구윤철 장관님, 식사 잘하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구윤철 장관님이십니까, 김

용범 실장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접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구윤철 장관님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제지요 7월 27일 날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뭐 최근의 하여튼 여러 상황을 반영한……

○임이자 위원 바짝 갓다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가 46.3이고 부정평가가 49.3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역전됐습니다. 계속 60% 이상 고공 행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역전이 됐고.

꽃인가요? 완전 진보 여론조사라고 소문이 났고 정평이 나 있는 데서도 보면 붙었어요. 49.3하고 49.1이 붙은 것 같던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경제 컨트롤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이렇게 긍정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부정이 많이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부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최근에 부동산 관련 이슈라든지 또 주식회사, 증시 이슈로 이런 부분……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보유세 관련해서 3배 발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기는 다를 겁니다. 꼭 뭐 3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나 보유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시다가, 세금 가지고 집값 잡겠다고는 안 했어요. 신중론을 펼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주 그냥 차등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저는 좀 추락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근저당,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집을 사시는 분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집을 팔았던 말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위법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셀프 대출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비난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매도하시는 분이 매수자에게 그렇게 셀프 대출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지난 부동산 규제정책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당선되시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대출을 막았잖습니까. 그 대출을 막은 데서 사실 거기도 피해자들이 많지요. 청

년이나 신흥부부나 실수요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대출도 막아 놓고, 대통령처럼 매도하시는 분을 잘 만나게 되면 셀프 대출이라도 받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그 꿈수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지난 간사지요, 박수영 위원님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하이닉스 관련해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것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고 후회와 반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이신 재정부 구윤철 장관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게 도입된 게요 해외에서는 상품이 있는데 그 해외에 투자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도 가는 그런……

○임이자 위원 압니다. 그걸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그 제도 자체 도입인데 이 상품을 설계하면서 레버리지도가 높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임이자 위원 그것 알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알고 찬성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하고 이런……

○임이자 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는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퇴할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무책임하게 이 건 가지고 사퇴한다 만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 정도 각오도 지금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의 의사결정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 홍콩에 있는 상품에는 투자를 하니까, 국내에는 없고 이러니까 국내에도 만들어 주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도는 도입이 됐고 단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레버리지도가 높아지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와서 관련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징벌적 과세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논의와 세제 논의는 별개로 실제 부동산의 수급 관리 목적이 아니라 공정 과세 차원에서 세제안 자체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공급 관련해서 아까 논쟁이 있어서 보니까, 실제 2022년도부터 2024년 사이에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중심으로 공급에 관한 인허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현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의 9·7 정책이나 올해 1월 말쯤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점이 지적은 있는데 실은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일단 인허가가 되고 나서 공급되려면 몇 년이 필요한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팩트체크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뭐 어느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고요. 단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착공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현실은 부득이한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더 모아야 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허가 시간도 단축하고 또 택지도 찾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와 관련해서 보면 보유세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예측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세가 얼마인데 앞으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될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계속 변동됨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미국 같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가액 중심으로 해서, 취득가액에다가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정에서의 공정 과세로 풀어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세금들은 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정산하고 공제하는 방식으로 풀어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발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는 부담을 최대한 많이 줄여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일정한 가격 이상의, 높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정상화 하려고 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거주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하라는 그 포인트 외에는 저희들이 정상화하지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저희는……

○오기형 위원 그래서 공정 과세의 공정의 기준이 뭐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공정의 흐름 속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그런데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과도한 과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장기보유에 대해서, 단순 보유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감면해 준 게 맞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 같은 경우도 내가 거주했을, 살았던 집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지만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이게 과세 형평에 맞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문제를 경청했을 때 국민들께서 많이 제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부동산의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제가 수단으로 작동될 수 없다, 작동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곧 발표하게 될 건데요. 청취도 많이 했고 오늘도 청취하는 과정인데요. 하여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봤을 때는 결코 저희들이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가가 한때 5300까지 떨어졌고 지금 5500 정도인데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운행 홀짝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증시까지 홀짝제로 이 정부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레버리지를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데 국민들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져 갖고 원가로 돌아오더라도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오늘 보니까 레버리지가 꼭 주가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것은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부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게 지금 증시의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은 레버리지만 100% 하기에는,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고 또 이게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조기에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거 제대로 수습 안 하고 그러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세금으로 하려는 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안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공급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김용범 실장께서는 닥치고 공급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입을 닥치게 만든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만 닥치게 만들었고요. 잔금을 치러 갖고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시민들의 입을 닥치게 하고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3배 정도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예를 자주 드시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의회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토지나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주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가 아니라 최초 구입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인상하는 율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맞추고 그래서 정말 안정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주정부 차원에서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촘촘히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서울의 전세가가 평균이 7억이고 임차인 중에 열 집 중에 일곱 집이 월세로 살거든요. 월세화가 됐는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 버리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해 갖고 전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시장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임이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3배 하는 것은 꼭 3배로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특정한 데는 3배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인식을 말씀하신 거고요.

조만간에 발표하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저희들이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부담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부담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처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추가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교육 하신다고 하신 거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추가세수라는 말은 법전에 없는 말입니다. 초과세수라는 말이 있고 초과세수를 하려고 하면 세계잉여금이랑 맞닿아졌지요. 그래서 국가재정법 90조에는 곧바로 쓸 수 없게……

첫 번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금을 먼저 정산하고 정산 후에 남은 금액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차입금, 국채 채무 상환에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계속 채무가 쌓이고 그러면 이자가

오르는 데다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세수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초과하는 세수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매년 저희가 기금을 만들더라도 이 국가재정법은 유지되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의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초호황 시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히는 이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소비성으로 또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단년도에 쓰는 것도, 소비성으로 쓰는 것도 아마 다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이것을 다 빚을 갚아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평가이기 때문에, 더구나 앞으로 더 우리가 개선되지 않습니까, GDP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야말로 전환기에 맞는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그러나 향후에 세입 여건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완충장치도 함께 하겠다는 게 미래대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배준영 위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주질의를 마쳤는데 또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사들의 합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실시를 하는데……

앞서 오전에 저희들이 공지해 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처장관은 일정 관계로 이석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3분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혹시 기획예산처장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장 조승래 그것은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석을 하시고요. 아니면 차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를 완료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오전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주식시장의 ETF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시장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제시장, 세계 마켓.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러니까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 다른 데 보시지요.

주요국 증시 추이인데 S&P500은 지난 두 달 동안 1.2%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하는 일본, 대만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등락폭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독특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총리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건가요? 이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 원인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박수영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단일종목 도입하실 때에 언론에 보면 금융위의 반대는 완강했다, 상품 승인을 강력히 거부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는 어땠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요, 이게 차관회의도 가고 국무회의도 갔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

○박수영 위원 그래서 아는데 입장이 뭐였냐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다만 이 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는 관여 안 했고 중립을 지켰네요, 금융위는 완강히 반대했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을 만드는 거 그것은 저희들은……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 안 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 제도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은 국무회의도 거쳤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범 실장이 혼자 밀어붙인 것처럼 보이네요, 금융위는 완강히 반대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삼전·닉스 단일종목 관련해서 운용사의 의견을 물어본 게, 슬라이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물어봤더니 세 군데만 출시 의향이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인 의향이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의견을 물어봐 놓고 그것도 안 따르는 것은 또 뭐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물어봤으면 그 의견들을 좀 따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 부분은 아마 출시하면서 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협의를 잘 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수영 위원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일정 나와 있는 거.

김용범 실장이 시작한 게 1월 달이고 시행령 통과는 4월 21일 그다음에 종목 출시는 5

월 27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한 게 6월 3일 선거를 대비해서 5월 27일 날 레버리지를 출시해 가지고 주가지수를 올리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런 식으로……

○박수영 위원 그러면 청와대 실장이 자화자찬한 내용 한번 볼까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고 진짜 돈이 들어왔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것은 어떤 돈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반도체 돈을 말하는 건지 무슨 돈을 말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착시가 반도체 들어온 거의 그 착시 얘기잖아요. 주식시장 얘기하다 나온 건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깐 착시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이 맞아요, 틀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그것은 정확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3분이 짧아 가지고 일단……

부총리님, 재정 당국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재경부 그리고 기획처차관이 참석을 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재경부차관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지금 차관님들, 장관님, 부총리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선 전에 1월 달에는 6월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그리고 급기야 5월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기재부·예산처차관님들 브레이크 안 거셨나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따로 전화로 하든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알려 주시고요.

대한민국처럼 적립기금 방식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장, 쉽게 얘기하면 거시경제 왜곡 효과가 다분히 있습니다, 국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중에 기금 소진 이후에 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청와대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 변동성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요 이게 국장의 한 14% 했던 것 조금 리밸런싱해 가지고 계속하던 정도 맞춘 것에서 더 올린 것 때문에 국장이 과열돼 가지고 그냥 뛰어야 될 것보다 더 똥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오게 되면 그 변동성 폭 또한 동시에 확대가 되거든요.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의 변동성이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찾아보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니까 선거 없다고 단타를, 당분간 한 2년 선거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거시경제 운용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금특위에서 정부에 주문해 놓은 게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기금 18년 플러스 펑크 난 것을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님들, 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고 투입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동안정화장치도 안 되고 보험료 인상도 안 된다, 국고로 하면 된다. 그러면 예컨대 올해 반도체 초과세수 가지고 국고 투입하실 수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 질의 말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혁신성장 과실로 복지 하겠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은 복지가 늘어나다 보면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세율을 올리거나 또는 나머지 연금 쪽이나 이런 걸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 재정을 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혁신성장을 통해 가지고 파이를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또 그다음에는 세금 이런 걸 감안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만을 올려 가지고 복지 쪽에 쓰겠다 하기가 어렵다 그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상훈 위원** 연금개혁특위에 차관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개혁안에 국고 투입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 가지고 그쪽에도 주시고 여기서도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부총리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쪽 말씀드리고……

코스피가 5200대까지 오늘 떨어졌습니다. 9500까지 올라갔다가 5200 됐으니까 4300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부총리님, 이게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까? 수년간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립

니까?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8000 지수, 그때 9500에서 8000으로 조금 내려갔지요. 그랬더니 ‘아직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부총리님도 지난 4월에 아직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들어와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5800, 5900이었습니다. 오늘 5200이니까, 부총리님 지금 들어갈까요? 몰타기 하면 됩니까?

주가 5000을 대선공약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주가 공약이 사실상 국정과제처럼 국민연금 동원하고 상법 개정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하는 등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국민들 주식 잔고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가배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에서 분석했다고 하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린 개미 손실이 56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도 상반기에 일찌감치 눈치채고 팔고 나갔습니다. 150조 정도 나갔어요.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친 것 아닙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우리 증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에서 오징어게임이라고 말하지요? 카지노로 변했습니다. 전 국토 강원랜드가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박주로 변질됐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국민들을 충동적 도박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제든 오늘도 영끌로 몰타기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 힘들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상품은 들어와서는 안 될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책 실패라고 보고요. 그 이유가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닙니다. 홍콩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미국도 4년밖에 안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0%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고 시기적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요동치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1.5배 이런 것 생각도 안 했고 바로 2배로 했지요. 그리고 홍콩은 자국 상장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안 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F4 회의가 있다니까 상장 폐지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정부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저희들이 부작용을 예측하면서 했지만 당시에는 어차피 해외로 나가는 그걸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도 투자하고 리스크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도입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른 영향이 나타났다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구윤철 장관님,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AI 대전환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이

게 무슨 내용입니까? 뭘 대체불가 대한민국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라도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유일하게 세계에서 제1등의 그걸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용어를 제대로 써야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공급망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뿐만 아니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런 제품을 만들자……

○임이자 위원 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미 관세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대미 관세 관련돼 가지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기는 협상 창구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국가 경제 관련돼 갖고는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는 구윤철 장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미국에서 자기들이……

○임이자 위원 대법원, 미국 연방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반적인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

○임이자 위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만있지 않으니깐 트럼프 정부에서 당연히 무역법 122조 가지고 임시 관세 10%를 때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301조 가지고 강제노동하고 그다음에 과잉생산 가지고 때리고 있는데, 강제노동 관련돼 가지고는 그 시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대미 관세 15%를 협의했고 거기에 대한 대미투자 관련돼서 서로 협약도 했기 때문에 15% 관세는 넘지 않을 것이라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답답한 게 인도 같은 경우에도 강제노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발 빠르게 손을 썼기 때문에 10%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12.5%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관세청 국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돼서 그걸 우리가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해 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장관 없네, 그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출기업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만 조금 해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향후에 과잉생산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15% 이상 넘어갈 소지도 굉장히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당초에 미국하고 합의한 대로 하여튼 15%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저희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그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12.5% 받았는데, 합쳐서 15%가 되도록 하여튼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위원 이미 15% 넘어가고 난 뒤에 우리 국가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 그러기 전에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가슴 졸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 못 하게 할까 하나까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의 역작용이 있다고 해서……

○임이자 위원 중국……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중국 관련해서 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어떤 나라라고 제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서 한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 예상 참여 규모라든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해외투자 수요 환류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때 제도 도입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했고요.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될지 하는 전문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저희들이 맡겨 두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쨌든 투자자들이 아주 패닉에 빠지고 많은 손해를 봤는데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를 대표해서 투자자한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사과라든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품·상품을 출시

할 때 좀 더 향후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에서라도 상품의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일차적으로 3000만 원 한도도 올리고 또 현금으로 하게 하고 또 1구좌에서 10구좌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님, 제가 장관님이 없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추가세수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초과세수가 법에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이 명분은 좋지만 기금이라 그러면 국회의 심사를 받지만 국가재정법 70조에 의해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가능한데 수조 원 내지 수십조 원이 국회의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짝퉁 추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어서 일단 그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이라고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 기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는 문제라든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이런 것 다 합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확실한 방향이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취소한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시중에 목소리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합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의 열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승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승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이자 위원 예.

○위원장 조승래 예, 의사진행발언.

○임이자 위원 저도 직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해 봤습니다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님께서 답변을 속 시원하게 안 해요,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가시고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주시고.

답변을 그냥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승래 저한테 주문하시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예, 그럼요.

○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어쨌든 위원들께서 저렇게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답변을 뚫고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도 위원의 역량입니다.

○임이자 위원 초록은 동색이다 이거지요?

○위원장 조승래 동색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정부위원들도 그렇고 답변을 서

로 보다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자는 거니까 가능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답변하는 정부위원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오기형 간사께서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해서요.

오기형 간사님.

○오기형 위원 오늘 레버리지 ETF 논쟁이 계속돼서 제가 부총리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해서 이게 한 두 달 동안 거래가 됐고 지난주까지 해서 수수료가 약 1300억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득을 보는 그룹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회고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장기투자, 분산투자의 시각에서 제도적인 설계나 또는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ETF라는 상품 자체가 본래 분산투자가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설정이 되고. 그래서 분산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ETF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제도 부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부과하는 이런 상품이 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고 몰빵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저희들도 월요일에 이해관계자들 간담회를 했고 여기 실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대표들과 만났는데 그분들 속에서도 현재의 이 변동성이 좀 너무 과도하다,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품성을 좀 줄여야 된다, 즉 레버리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비율을 줄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배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이든 법이든 고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금융상품을 승인해서 거기서 세팅이 됐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배율 조정을 이제 규정 바꿔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고려해서 실제…… 아까 이종욱 위원님도 아주 더 세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많은 시장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주저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상품 설계 자체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의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걸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 업무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전부 다 완전체로 구성이 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때로는 충돌되고 때로는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는 정책

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가 결산 또 정기국회 계속하면서 일을 진행할 텐데 그때 보다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두 분께는 우리가 지금 소위 구성을 빨리해서 활동에 들어가야 하니까 소위 구성을 좀 서둘러 주시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법안소위가 합의된다면 법안소위라도 먼저 구성을 해서, 우리가 내일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합의되면 처리하고 그리고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논의를 좀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신현송 한국은행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9항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까지 이상 138건의 안건은 간사 협의 후 추후 구성될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이광재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남준 김상훈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박수영 배준영 안도걸 안상훈 어기구
오기형 윤영석 윤후덕 이광재 이성권 이종욱 이준석 이춘석 임이자 정태호
조승래

○출장 위원(1인)

李憲昇

○청가 위원(4인)

강민국 김성환 신정훈 정성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 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대외경제국장 김동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정책조정관 주환욱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국고정책관 허승철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정책기획관 박봉용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재정혁신정책관직무대리 임영진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부총재보 김제현
부총재보 이지호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권영세 박대출 박성훈 유상범 이인선 이진숙 최은석	강민국 김상훈 배준영 안상훈 이성권 이종욱 李憲昇	더불어민주당	2026. 7. 8.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이상 7건 7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7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이상 3건 7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7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7월 14일 회부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이상 5건 7월 15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이상 2건 7월 16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6.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이상 3건 7월 2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이상 3건 7월 2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2. 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5)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6)

이상 2건 7월 27일 회부됨

○청원 회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7. 16. 김제현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7월 2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제36523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총리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133호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139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